

# 민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 공식 출범

국회서 TF 발대식 “검찰개혁 물꼬”  
김병기 “檢 고질적 병폐 극에 달해”  
“이재명 죽이기 등 만행 끝낼 것”  
조국혁신당, 檢 개혁 공동TF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 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솔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검찰 내에 조작수사 등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단장인 한 최고위원 외에 최기상 부단장, 이견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위

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배상운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으며 TF 발족을 예고한 바 있다.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

기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이런 조작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현재 사법부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견태 의원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정치 조작기소와 법원의 확장해석이 결합하면 완벽한 검찰 독재가 구축된다”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 사

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논의됐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석 전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어렵다”면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출발 동기(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4법에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검찰개혁 내용이 담겨 있다”며 “책임 있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완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우상호 “광주 군공항 문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

### “사회 갈등 이슈로 보지 않아”

대통령실은 7일 광주 군 공항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라고 분명히 했다.

우상호(사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문제는 사회 갈등 이슈로 보지 않는다. 정책적 견해 차이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됐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라며 “그에 따라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박찬대 “호남 숙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사진) 의원이 7일 광주를 찾아 “호남의 숙제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호남 방문 일정은 단순한 순회가 아니라 호남 앞에 서는 시험대”라며 “공공의료, 광역교통, 에너지 산업 등 호남의 숙제를 해결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장 간 팀워크가 중요하다. 나는 이를 뒷받침할 책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역공약으로 △광주5



·18현법전문수목 △AI국가산업육성 △도심철도지하화 △전남 공공의대 신설 △해상풍력·태양광 산업 육성 △여수석유화학단지 고도화 △전북 전라선 고도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하계올림픽 유치 등을 발표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호남살이’를 선언하며 전라북도 전주와 나주·여수 등을 돌며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성현 기자

## 안철수, 국힘 혁신위원장 전격 사퇴… 전대 출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위원 인선에 반발해 내정 다툼 만인 7일 위원장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



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부터 먼저 타진했다”며 “주말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쇄신안을)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 “대선 공통공약 추진”

### 실무 협의 진행키로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 (가칭)를 구성해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

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건”이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장도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률

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는 이견이 많은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7월 중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진 의장은 향후 이런 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국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속속 의결

### 14일 정동영·배경훈 17일 조현·김정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외통위는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조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7일 제헌절 행사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이견이 있어, 청문회 실시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산자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후보자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중진 의원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해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직업 외교관이다.

김정관 후보자는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에서 산업관세과·외화자금과·종합정책과 등을 거쳤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세계은행 협조금융 전문가를 역임한 ‘정책통’으로 꼽힌다.

배경훈 후보자는 LG의 초대대 AI 모델 ‘엑사원’ (EXAONE)의 개발과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다.

서울=김선욱 기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 과방위 통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

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

으로 규정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서울=김선욱 기자